

민주 전북지역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어찌되나?

3선 이상 중진 원내 협상 따라 유동적

더불어민주당에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가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정됐다.

전북 국회의원 중 현재 내정된 상임위 소속 의원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운 의원(전주시 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과 윤준병 의원(정읍시, 고창군)이 내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 간사직을 맡는다.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환경

법사위 - 이성운, 과방위 - 정동영
복지위 - 박희승, 한노위 - 신영대
농해수위 - 이원택 · 윤준병 의원
3선 이상 중진은 향후 발표 예정

노동위원회는 신영대 의원(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갑)이 내정됐다. 3선 이상 중진의원에는 상임위원장이 여야 원내 배분 협상을 통해 그 결과를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하고 있기에

상임위원장은 후반기에나 할 예정이며, 이번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은 행정안전위원장을 희망하고 있고, 안호영 의원(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희망

하고 있으며, 이춘석 의원(익산시 갑)은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상임위원장 협상 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아 상임위원장은 아직 개별의원 자신의 희망만 있을 뿐 실제 선정되기에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도민들은 "이번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비교적 선수도 많고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어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 제정과 예산심의 등을 통해 전북 몫을 제대로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조국혁신당, 민생 당론 1호

"노동권리 보장법 추진"

조국혁신당은 지난날 31일 민생 당론 1호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려도 단체교섭권조차 없는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재원 혁신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법 원칙·방향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의 노동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이 노동 관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의 초단시간 노동 납용을 줄여가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간접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업 단위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전국민고용보험 및 상병 수당 도입 등을 약속했다.

신장식 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민생 당론 1호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은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 노동관계법 등이 포함된다"라며 "비임금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은 근로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선택적 노동관계법을 보편적 노동관계법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민주 이성운 의원,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7대 의혹에 더해 직권남용 등도 포함"

"최장 6개월 내 100여명 수사 인력 투입... 대통령 등이 특검 직무 관여하는 행위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시 을)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날 31일 오전 국회의사당 브리핑룸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성운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가는 권력을 수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는데, 본인과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전부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타인에게는 엄동철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가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 이냐고 물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도 포함했으니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이 지난날 31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고 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자수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심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며 "이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며, "검사동일체가 아닌 민심 동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불공정과 무도함에 맞서 국민이 명령한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하며,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 1차 추경 1조2089억원 확정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가 지난날 30일 제29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2,089억원 규모의 정읍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0일 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해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의결·확정된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75억5,681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정읍시 어린이·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순 의원이 '야생 들개에 의한 피해 예방대책 서둘러야 합니다'를 주제로, 정상철 의원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하자'를 주제로, 이도형 의원이 '정읍시 달빛 사랑 숲의 공간력은 어느 정도?'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 태권문화과 부서명칭 변경

무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의결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지난날 31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무주군의회는 무주군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태권도시 건설을 위해 태권문화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총원은 그대로 두고 직제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무주군이 가장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집행에 대한 의결이 그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무주에 들어와서 살고 태권도시를 무주라는 공식이 성립되도록 전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버스 노선 분리 운영 개선책 마련을"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5월부터 실시된 무진장버스 노선 분리 운영이 짜임새 있는 배차와 홍보가 결여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지난날 31일 열린 제3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 촉구' 5분 발언을 하며 노선분리 후 바뀐 버스노선체계와 시간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배차간격이 길어져 주민불편이 크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기존 농어촌버스의 낮은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운행노선 간소화가 정착 실재와 다른 배차시간, 사전공지 미흡 등으로 혼란을 겪는 주민을 양산했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꼼꼼한 대안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할 정책이 버스노선 개편만 신경 쓰고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오광석 부의장은 이어 "버스노선과 배차시각 조정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대표적 민생사무이다. 사전준비 부족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무주군이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오광석 부의장은 노선분리 후 발생한 주민불편이 버스공영제의 폐해라는 의견에 대해 "버스노선 분리·개편을 추진한 것은 무주군이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단계일 뿐,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하고 "행정의 치밀함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를 버스공영제 탓으로 곡해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